

2 0 2 3

I S S U E

P A P E R

2023 이슈페이퍼 vol.03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 및 사회 갈등현황과 추세분석 연구

제 03 호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목 차

제목 차례

I. 들어가며	3
II. 계층의 정의	5
1. 계층 정의의 어려움	5
2. 주관적 계층 인식: 시계열적 추이	6
III. 경제 불평등	8
1. 지니 계수를 통해 살펴본 경제 불평등	8
2. 소득과 자산 분포의 변화	12
IV. 계층갈등 인식	17
V. 결론	22

그림 차례

[그림 1] 주관적 계층 인식, 2003-2021(%)	8
[그림 2] 지니계수: 국가간 비교	9
[그림 3] 지니계수 (대한민국), 2012-2020	11
[그림 4]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2012-2020	13
[그림 5]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21	15
[그림 6] 소득 5분위 배율의 시계열적 변화: 세전 및 세후 소득	16
[그림 7]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2	18
[그림 8]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2	19
[그림 9]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3-2022	20
[그림 10] 사회갈등의 원인: 빈부격차, 2013-2022	21

부록 차례

[부록 1] 관련 지표 설명	25
[부록 2] 주요 지표 수치	28
1. 주관적 계층인식	28
2.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8
3. 사회갈등의 원인	29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

하상웅(서강대학교)

I. 들어가며

최근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채택한 많은 국가들이 현재 포퓰리즘(populism),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공산주의 진영에 속했던 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브렉시트) 혹은 미국(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들 간 분열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 역설적으로 자유의 확산 현상과 맞물려 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국가 간 경제 불평등이 감소했다. 또한 이민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문화 다양성이 높아졌다. 한편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비약적으로 늘려주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확산이 가져온 어두운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자유무역의 부작용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 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 역시 자국민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이질감을 자극하여 반이민정서(anti-immigrant sentiment)와 국수주의(xenophobia)를

강화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강화시켜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웠던 과거와 달리, 정파성을 띤 미디어(partisan media)와 일인 미디어가 넘쳐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망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 불평등의 심화, 이민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극화는 한국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현상이다. 이민의 유입으로 인한 인종 및 종교 다양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예외로 치부될 정도로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아직 문화 다양성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는 겪고 있지 않다. 대신 빈부격차 및 계급 갈등에 대한 우려와 정치 영역에서의 이념 양극화에 대한 고민은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전체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N포 세대', '수저론' 등과 같은 담론이 확산되었던 사실, 그리고 2021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수행된 국제 여론조사에서 한국 응답자들이 유일하게 '건강', '가족' 등을 제치고 '물질적 풍요(material well-being)'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았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상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계층 인식과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 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인식 간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 불평등 상황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의 심각성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냉철한 정책 조언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현실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주관적인 인식과 현실 간 간극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다음, 그에 맞는 정책적인 처방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보조 지표인 계층 갈등 인식에 더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II. 계층의 정의

1. 계층 정의의 어려움

계층 갈등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계층’의 개념 정의부터 내릴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단 하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에 기반한, 사람들의 간의 위계질서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계층은 계급(class)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 자본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가 문제가 된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자본을 소득으로 등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지만, 대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낮은 계층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개인의 소득과 자산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소득과 자산만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직업 혹은 교육수준과 같은 지표들이 계층을 구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제적 자본과 상관관계를 갖는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또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까지 계층의 결정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계층은 계급이라기보다 지위(status)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고 자산이 풍부하다고 해도, 사회적 평판이 높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교육 수준이 낮다면 계층 사다리의 상층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

럽다는 말이다. 반대로 소득과 자산이 낮다고 해도, 직업이나 교육 수준이 높다면 위계질서의 상층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소득, 자산, 직업, 교육수준 등)를 활용하여 한 개인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대신, 주관적인 인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인식 간에는 항상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흥미로운 점은 객관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나, 객관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행동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계층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계층을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인식에 의거하여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계층 위계의 모양과 그 사이의 갈등 양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계층을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소득과 자산에 기반한 지표들은 예상과 달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 혹은 자산을 갖추어야 '부유층' 혹은 '빈곤층'으로 정의 내릴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물론 주관적 인식을 이용해 계층을 측정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은 아니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지표 중 국가 내 경제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 계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보고한 소득과 자산 분포, 그리고 계층 갈등 인식을 활용한다. 그 전에 우선 한국인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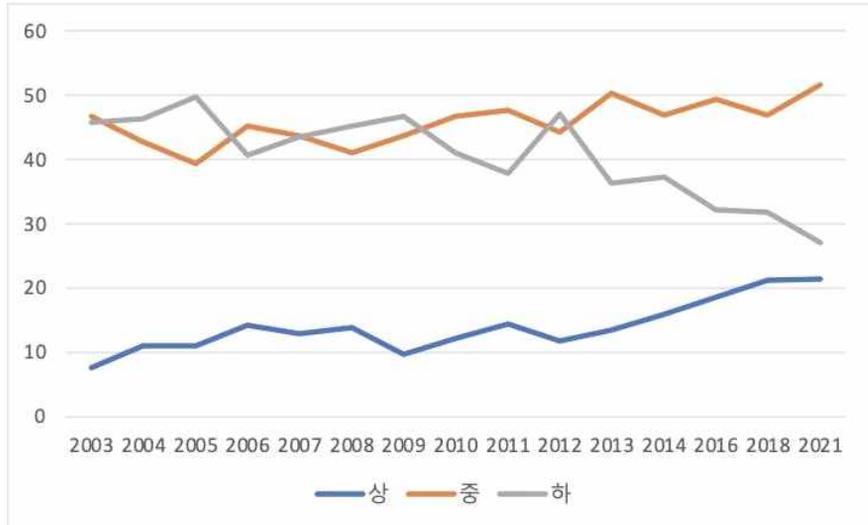
2. 주관적 계층 인식: 시계열적 추이

[그림 1]은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 확인된 주관적 계층 인식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가 개시된 2003년 결과를 보면 자신의 계층이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가장 낮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중'(46.6%) 혹은 '하'(45.8%)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자신의 계층이 '상'이라고 답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2년 그 비율이 11.8%였던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여 2018년과 2021년도에는 각각 21.3%와 21.4%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계층을 '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계층을 '하'로 보고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약간의 부침이 있긴 하지만 2003년에 45.8%로 시작한 그 비율은 2005년에 49.7%로 정점을 찍고, 2012년까지 47.0% 선을 유지하다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27.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계층을 '중'으로 정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큰 시계열 변화 없이 40~5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2003년 이후 한국인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2003년에는 '상'과 '하'의 비율 격차가 거의 40%포인트에 달했는데, 2021년에는 그 격차가 5%포인트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계층 사다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게 책정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계층 인식의 시계열적 추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 정도가 통념과는 달리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림 1] 주관적 계층 인식, 2003-2021 (%)



주: “한국 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1~4까지는 “하”, 5와 6은 “중”, 7~10까지는 “상”으로 정의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중치 고려함.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는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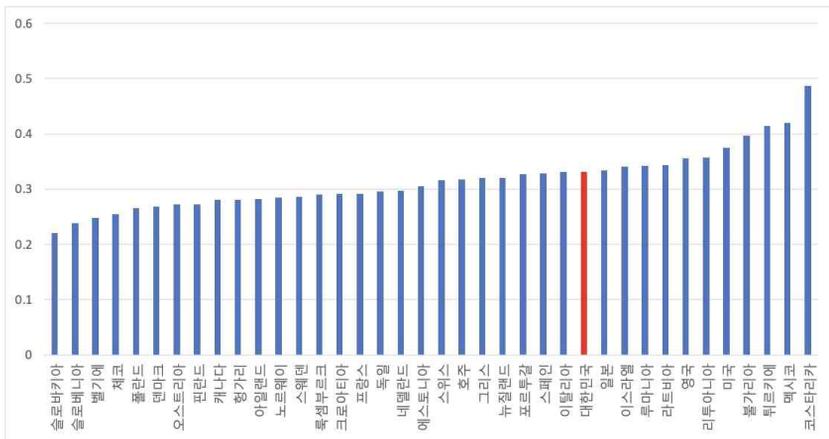
III. 경제 불평등

1. 지니 계수를 통해 살펴본 경제 불평등

경제 불평등, 계층 갈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문제로 인해 정치 체제의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자유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 경제 불평등은 완화된 면도 없지 않지만,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 안에서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외국으로 보내고,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한때 중산층의 지위를 누렸던 자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들의 타격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 정책 결정 과정과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 과연 경제 불평등이 최근 심화되었는가? 특히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림 2] 지니계수: 국가 간 비교



- 주: 1)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금공제 및 이전 후).
- 2)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함.
- 3) 일본(2018년), 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위스, 튀르키예(2019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라트비아, 미국, 코스타리카(2021년), 나머지 국가들은 2020년 자료.

출처: OECD (2023), Income inequality (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Accessed on 2 September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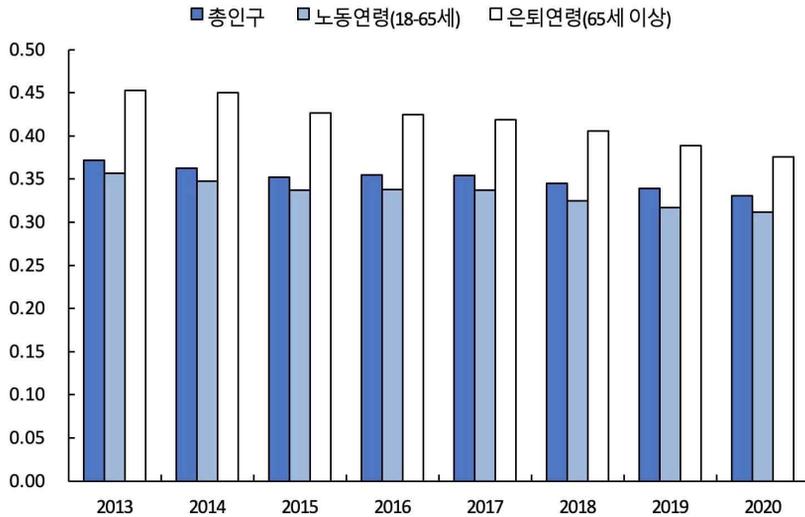
국가 단위의 경제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가 고려하는 정보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이다. 가처분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임금, 자본 소득, 공공 현금 이전(public cash

transfer)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인구의 축적 비율과 소득의 축적 비율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 값을 갖는다. 0은 가장 평등한 상태, 1은 가장 불평등한 상태를 지칭한다.

[그림 2]는 OECD에서 제공한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각 국가별 가장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를 한 것인데, 한국은 2020년 현재 지니계수 0.331로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21년 현재)로 지니계수가 0.487에 달한다. 미국(2021년 현재)과 일본(2018년 현재)도 각각 0.375와 0.334로 한국보다 높은 지니계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핀란드(2021년 현재)와 노르웨이(2021년 현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각각 0.273과 0.285로 한국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자료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2019년 현재)로 지니계수가 0.222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OECD에서 제공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지니계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으면 전체적인 추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행된다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에 비해 경제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다면 현재 상황을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림 3] 지니계수 (대한민국), 2012-2020



주: 1)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금공제 및 이전 후); 총 인구, 노동 연령 인구 (18-65세), 은퇴 연령 인구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2)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함.

출처: OECD,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S05&conn_path=I3)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출판예정)에서 재인용.

[그림 3]은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의 시계열적 추이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인구, 노동연령 인구, 은퇴연령 인구 기준 모두에서 한국의 세금 공제 후 경제 불평등 정도는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총인구 기준 지니계수가 0.35를 넘었지만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노동 연령 인구와 은퇴 연령 인구로 나누어 보아도 유사하다. 특히 은퇴 연령 인구의 경우 2012년에 0.45에 달했던 지니계수가 2020년에는 0.40 미만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인들의 경제 불평등 인식이 반드시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과 인식 간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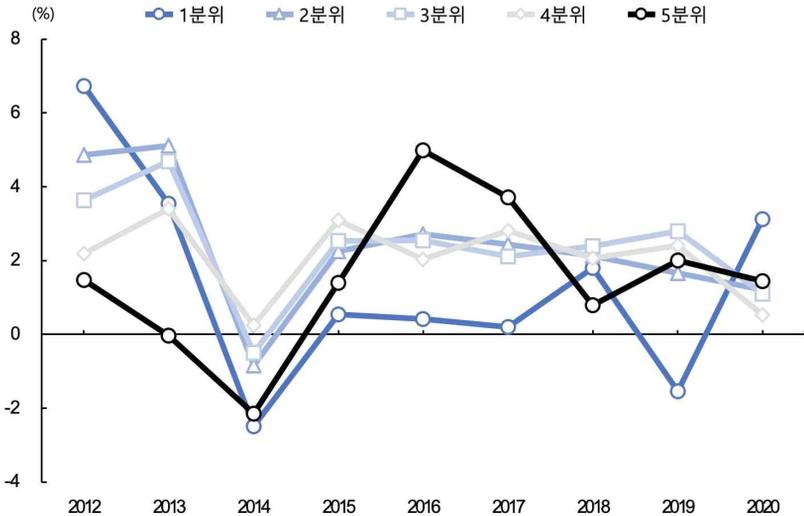
상으로 한국의 세후 소득 불평등 정도는 완화되는 경향성을 보임은 명확하다.

2. 소득과 자산 분포의 변화

한국에서 경제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확인해보면 경제 불평등의 일관된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경제 불평등이 최근 지속적으로 심화된 미국에 비해, 한국의 경제 불평등의 시계열적 추이는 보다 더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자산 분포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게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전국의 약 20,000 가구를 대상으로 대면면접과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여 응답을 받아 구축한 자료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자료가 갖는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과 자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모집단(population)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결과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시계열 비교를 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득 추이는 개인이 아닌, 가구가 시장에서 취득하는 시장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균 실질소득을 추적한다. 가구원 수가 가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계산하여 검토한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지정하여 총 5개의 소득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변화 추이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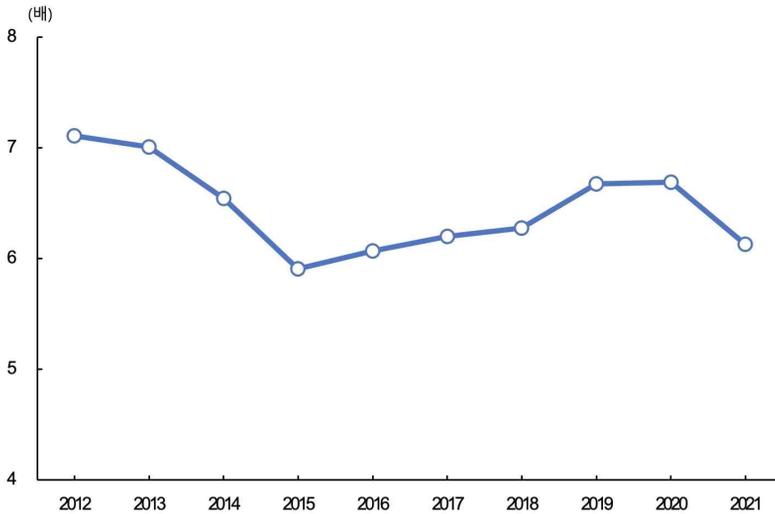
주: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 실질시장소득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1분위 =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 5분위 =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반함.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증가율이 줄어들다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늘어났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증가율이 줄어들다가 2015년 반등한 후 2017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소득 2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가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 등락이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는 2012년 이후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가 눈에 띄게 심화되었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자산 기준으로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동일한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가구 자산 기준으로 5개 분위를 나눈 후 가장 자산이 작은 1분위

대비, 가장 자산이 큰 5분위의 순자산 배율의 시계열적 추이를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배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이 시기에는 자산 기준 1분위 대비 자산 기준 5분위의 자산 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 기준 경제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수준이 2012년보다는 낮은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순자산 5분위의 배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국 객관적으로 순자산 1분위 대비 순자산 5분위의 자산 배율이 6배에서 7배 차이가 나는 것이 불평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는 별개로, 적어도 시계열 추이를 놓고 보면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자산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5] 순자산 5분위 배율 (5분위 자산/1분위 자산), 2012-2021



주: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분위 자산 대비 5분위 자산의 비율. (1분위 = 자산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 5분위 = 자산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 순자산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자산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반함.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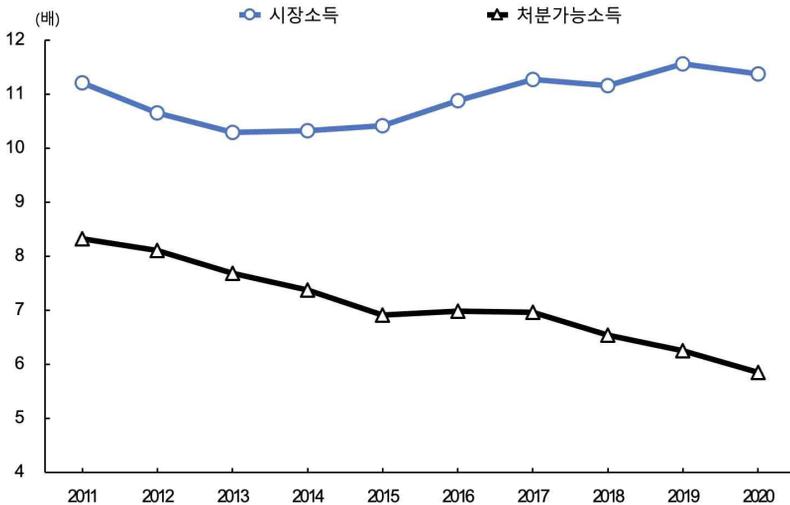
지난 십여 년간 경제 불평등(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경제 불평등 수치가 사회 갈등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객관적인 경제 불평등 상황과 별개로, 일반인들이 경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강하면, 충분히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대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경제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피케티(Thomas Picketty)와 그의 동료들의 초기 미국 경제 불평등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개인 수준에서의 납세 기록을 꼼꼼히 시계열적으로 훑어보아야 가능한 작업이다. 설문조사자료 혹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혹은 자산 기준 10분위 혹은 5분위로 나누어 보는 작업은 극도로 부유한 상위 1% 혹은 0.5%의 영향력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조세 정책이 경제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에 위에서 검토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 내용을 확인해본다.

[그림 6]은 세전 소득인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5분위의 (1분위 대비) 배율과 세후 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을 표시하고 있다. 세금 전후 소득들의 추이이기 때문에 두 표 간 차이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시장소득 기준 5분위의 배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분위 시장소득 대비 약 10~11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계열적인 변화를 보면 2013년 이후 조금씩 5분위의 배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1분위와 5분위 간의 세전 소득 격차가 조금씩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런데 세후 소득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 배율은 1분위 대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적어도 2017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세후 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은 꾸준히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현상은 집권당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과 달리, 한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 추이에 집권당의 이념 성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림 6] 소득 5분위 배율의 시계열적 변화: 세전 및 세후 소득



주: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1분위(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소득 대비 5분위(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 소득의 비율. 소득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반함.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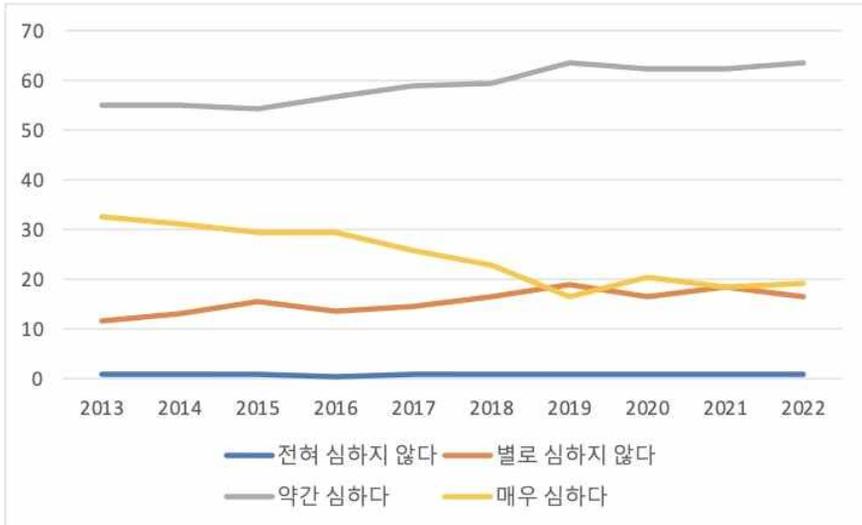
이 결과 역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설문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자가보고 (self-report)에 의존하고 있다. 소득과 달리 자산의 경우, 특히 자가보고로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득 분위를 5개가 아니라 7개, 10개 등으로 나누었을 때의 결과가 여기에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그림 6]은 시계열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01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자가보고 행태에 변화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결과이다. 즉, 과거에 비해 지금 고소득층이 자신의 자산수준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1분위 대비 5분위의 세후소득 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꾸준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계층갈등 인식

다음으로 한국인의 갈등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확인한 내용은 적어도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가 주관적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계층갈등 인식을 살펴본다.

[그림 7]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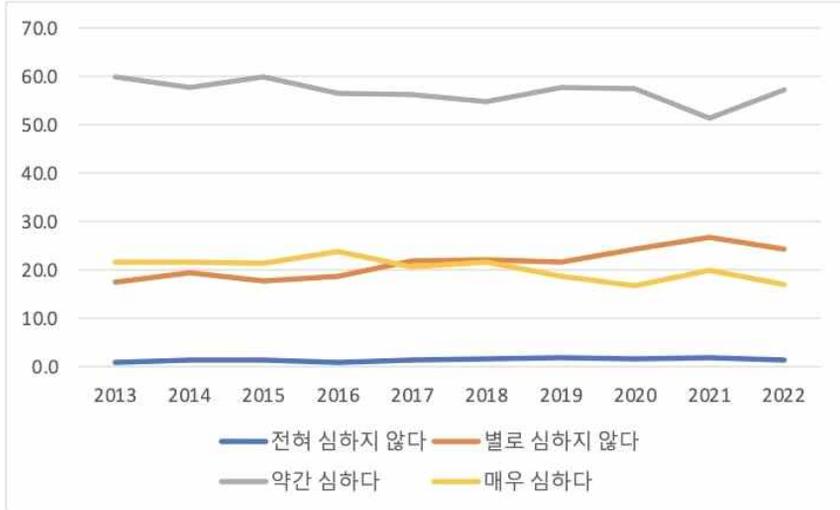
주: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은 한국 사회에서 빈곤층과 중상층(중산층과 상류층)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비율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빈곤층-중상층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감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빈곤층-중상층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 혹은 “약간 심하다”라고 답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총 80%를 넘었다.

그러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빈곤층-중상층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32.6%였으나, 그 비율이 2019년에는 16.6%, 2020년에는 20.4%로 눈에 띄게 줄었다. 동시에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에 11.7%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19.0%, 2020년 16.4%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소득 및 자산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차이가 연도별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림 8]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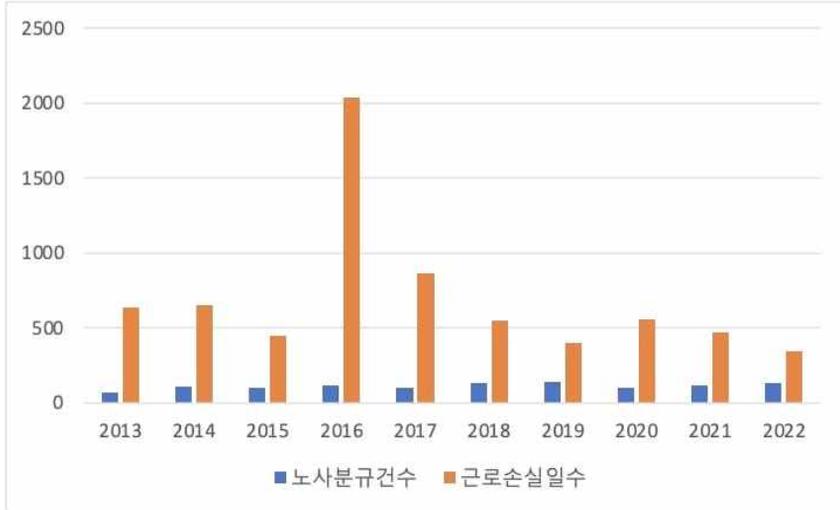


주: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계층 갈등은 빈곤층-중상층의 이분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분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노사갈등이 빈번히 벌어지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들이 노사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림 8]은 근로자 대 고용주 간 갈등 인식에 대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이후 줄곧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3년에는 21.5%였는데 2016년 23.6%로 조금 올라간 이후, 2020년에는 16.8%까지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갈등 인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3-2022 (건, 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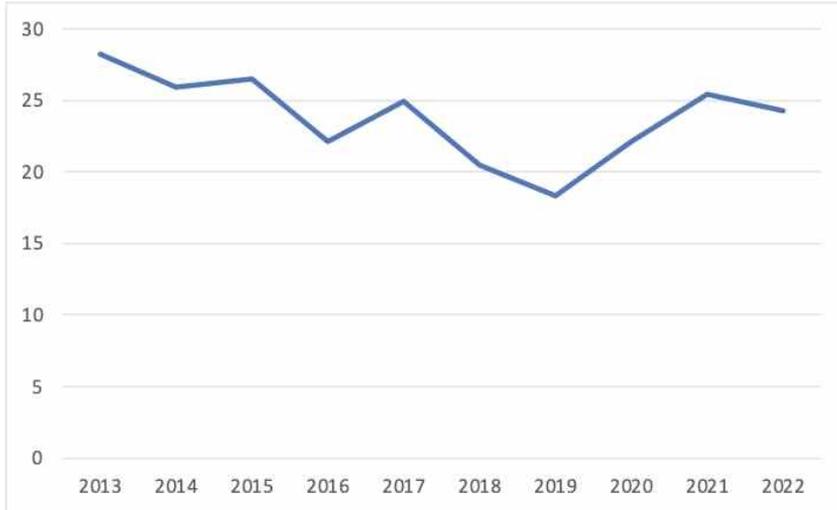


주: 근로손실일수 = (파업 기간 중 파업 참가자 수 × 파업기간) ÷ 1인 근로시간(8시간); ILO 기준에 따라 임금 근로자 1,000인 당 근로손실일수 계산함.

출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 보고서[일보]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보]), 각 연도.

한국 시민들의 노사갈등 인식이 완화되는 경향성은 객관적인 지표와도 일치하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10여년 동안 노사분규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고 근로손실일수도 2016년 예외적으로 높았던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9]에서 보이는 결과는 [그림 8]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추이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통념과는 달리 최근 한국에서 노사갈등 정도는 심각해지지 않고 있고, 시민들 역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10] 사회갈등의 원인: 빈부격차(%),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빈부격차’, ‘권력 집중’,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기타’가 제시되었음. 2018년부터는 ‘1순위’와 ‘2순위’를 고르라고 요구하였음. ‘1순위’로 고른 범주만을 반영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한국의 사회동향 2023』(통계청 통계개발원, 출판예정)에서 재인용.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지 않은 한국에서 경제 불평등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 10]은 한국 사회의 갈등의 원인 1순위로 ‘빈부격차’를 고른 설문조사 응답자의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빈부격차’, ‘권력 집중’,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등과 같은 응답범주 중에서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27%대를 유지하다가 감소한 후 201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2013~2015년, 2017년, 2021년에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경제 불평등 상황과는 별개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이 상당함을 시사해 준다.

V. 결론

경제 불평등의 심화, 이민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특정 짓는 요소들이다. 한국의 경우, 이민의 유입으로 인한 인종 및 종교 다양성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긴 하지만, 빈부격차 및 계급 갈등에 대한 우려와 정치 영역에서의 이념 양극화에 대한 고민은 깊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경제 불평등 현황을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십여 년간 경제 불평등(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계층을 '상'이라고 규정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늘고, '하'라고 규정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줄고 있다. 그리고 지니계수 기준으로 국가간 비교를 하였을 때 한국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그 정도가 최근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한국의 조세 정책의 재분배 기능도 잘 작동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세후 소득 격차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발견이 한국에서 경제 불평등이 사회 갈등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객관적인 경제 불평등 상황과 별개로, 일반인들이 경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강하면, 충분히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불평등 수준과 인식을 완화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작업은 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런데 계층 갈등을 극복하여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잘 해석해야 한다. 이는 실제 경제 불평등의 수준 및 시민들의 불평등 인식보다 세간에 통용되는 불평등 담론이 과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객관적인 지표의 변화 추이와는 별개로 설문 응답자들의 절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중상층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빈부격차'가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과 인식간의 괴리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가(관료) 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지표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불평등 현황과 인식이 심각하다고 과장하는 행위는 주로 언론을 통해 재생산될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행, 노인 빈곤 문제에서 비롯된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 청년실업의 부작용으로 부각되는 사회 문제, 주목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상이 현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화들이 경제 불평등 정도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필요 이상으로 노사 갈등이 과장되는 측면도 있다. 결국 소득, 자산, 노동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정보전달과 가짜뉴스 근절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일인 미디어까지 자유롭게 유통되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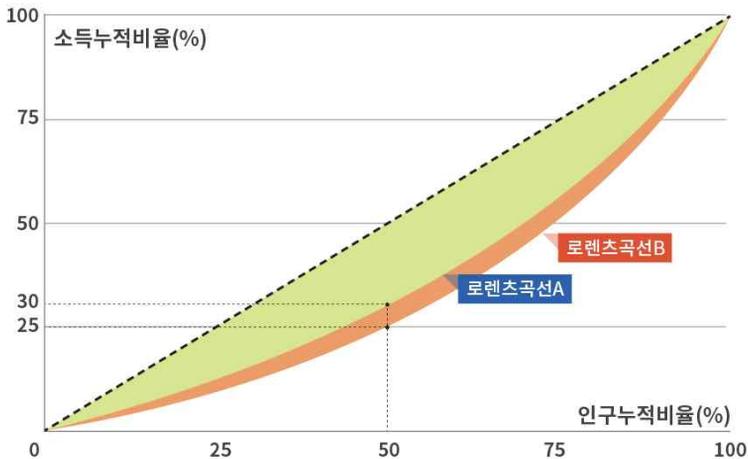
둘째,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세금을 이용한 한국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세정책은 그 내용이 복잡하지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리고 각 국가들의 조세정책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국가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많지 않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이 나름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시행된 정책들임에도 언론이나 정당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논리

적으로만 따지면 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정처럼 국가의 조세정책에서도 진보-보수를 넘는 국가 차원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상, 활용지표, 산출방식 등에 따라 측정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경제 불평등 연구의 비약적인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연구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의 세금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목적으로도 개인의 납세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분배 정도를 유추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자료에 연구자어나 정책입안자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 불평등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 활용 가능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부록 1〉 관련 지표 설명

[부록 그림 1]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



지니계수: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가 0, 완전 불평등한 경우가 1임.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로렌즈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전체 인구를 나열하여 총인구를 100으로 설정하고 가로축은 인구누적비율로, 세로축은 이 사람들의 소득을 차례로 누적한 총소득을 100으로 하는 소득누적비율로 설정함. 그리고 인구누적비율과 해당소득누적비율을 연결한 선을 로렌즈곡선이라고 정의함.

그림에서 보면 사각형에서 대각선은 인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비율이 일치하는, 즉 모든 인구가 동일한 소득을 보유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여줌.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곡선 A 또는 B와 같은 로렌즈곡선이 만들어짐. 로렌즈곡선 A와 B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의 50%가 곡선 A의 경우 전체 소득의 30%를 점유하고

있지만, 곡선 B의 경우 전체 소득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A보다 B에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즉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의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값(=  / )과 같기 때문에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함.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즉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다면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0이 되어 지니계수 역시 0이 됨. 반대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로렌츠곡선은 직각의 형태를 갖게 됨. 이때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의 면적과 일치하여 지니계수는 1이 됨.

균등화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각 가구원의 소득으로 전환한 개인소득을 균등화 개인소득이라고 함. 가구소득을 균등화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균등화 처리라고 함.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함. 소득이 얼마만큼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는 주로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함. 균등화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곱근지수 방법을 사용함. OECD 제곱근지수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개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임. 예를 들어 성인 2명, 아동 2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가구의 균등화 개인소득은 200만 원(=400만 원 / $\sqrt{4}$)임.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임.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고, 공적이전지출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함. 즉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

는 부분임. 그러므로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차이 정도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 한 종류의 소득분배지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https://kostat.go.kr/income/>

〈부록 2〉 주요 지표 수치

[부록 표 1] 주관적 계층 인식(2003-2021,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층	7.7	11.0	11.0	14.2	13.0	13.8	9.7	12.2
중층	46.6	42.7	39.3	45.1	43.6	41.0	43.6	46.7
하층	45.8	46.3	49.7	40.7	43.5	45.2	46.7	41.0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6	2018	2021	
상층	14.4	11.8	13.4	16.0	18.5	21.3	21.4	
중층	47.6	44.2	50.3	46.8	49.3	46.9	51.6	
하층	37.9	47.0	36.3	37.2	32.2	31.8	27.0	

[부록 표 2]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2013-2022,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혀 심하지 않다	0.8	0.8	0.8	0.5	0.8
별로 심하지 않다	11.7	13.1	15.6	13.6	14.5
약간 심하다	54.9	55.0	54.3	56.6	59.0
매우 심하다	32.6	31.0	29.3	29.4	25.8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혀 심하지 않다	1.0	0.9	0.9	0.8	0.9
별로 심하지 않다	16.6	19.0	16.4	18.5	16.4
약간 심하다	59.5	63.5	62.3	62.2	63.6
매우 심하다	22.9	16.6	20.4	18.5	19.1

[부록 표 3] 사회갈등의 원인: 빈부격차(2013-2022,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21.1	19.4	20.5	17.3	17.1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22.3	23.5	22.9	23.4	24.5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11.9	10.5	10.4	12.2	12.8
빈부격차	27.0	26.6	26.6	22.8	24.6
권력 집중	10.2	12.2	11.0	15.1	12.0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5.7	5.1	6.6	6.8	7.2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1.6	2.3	1.6	2.1	1.7
기타/모름/무응답	0.4	0.4	0.4	0.4	0.2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28.0	28.5	25.8	15.7	23.1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25.0	21.3	22.5	20.1	19.3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11.8	12.9	10.8	20.9	12.6
빈부격차	20.0	18.0	22.2	26.9	25.5
권력 집중	8.4	10.8	11.1	10.0	12.9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5.5	6.2	6.1	5.2	5.0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1.3	2.1	1.5	1.1	1.6
기타/모름/무응답	0.1	0.2	0.1	0.0	0.1